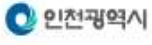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4월 22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노동정책과	담당자	• 노동행정담당 장 은 미 ☎440-4401 • 담당자 김 상 희 ☎440-4404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 만든다.

-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4개 실천과제 , 35개 세부사업 제시 -
- 인천시 노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초석 마련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천형 노동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노동단체,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정책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구현’이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14개 실천과제, 3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5년간 115,09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인천시 노동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이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이 분명한 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 전략으로 뒷받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충 시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노동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천시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 등은 추가로 발굴해 반영해 나가고 주기적인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거쳐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사진자료(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21.3.22))
2. 인천시 노동정책 비전과 목표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21.3.22>



인천시 노동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 구현

목표

구분	현재	'21년	'22년	'23년	'25년
고용률	66.5% (전국8위)	70.6%	71.2%	71.6%	전국1위
근로여건 만족도	30.7 (특광역시4위)	31.5	32.1	33.7	특광역시1위
노사민정 활성화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전국1위

4대 추진전략

14개 실천과제 35개 세부사업

일과 삶의 균형

- ①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 생활임금 적용 확대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 모니터링 **신규**
- ② 노동복지 강화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신규**, 통근버스 운영 **계속**, 작업복 세탁소 설치 **신규**
- ③ 산단노동자 보호 및 산업안전 강화
 -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구성 **신규**, 표준노동기준 마련 **신규**,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계속/신규**, 산업재해예방 체계 구축 **신규**

노동권의 향상

- ① 청년노동자 권리 보장
 - 중소기업 노동문화 개선 **신규**, 일경험 사업 지원 **계속/신규**, 청년노동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신규**
- ②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확대**,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신규**, 민간위탁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신규**
- ③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신규**
 -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인식개선, 치유허동 지원
- ④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신규**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 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신규**
 -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특수고용 등 보호사업, 쉼터 설치

노사상생 강화

- ① 노사상생 지원
 -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 **확대** 및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신규**
- ② 지역사회 상생지원 **계속**
 - 산업평화대상 제도 개선,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방지

거버넌스 강화

- ① 노동행정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신규**
- ② 경영참여 확대
 -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확대** 및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신규**
- ③ 거버넌스 강화
 - 노동단체 네트워크 지원 **신규** 및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확대**
- ④ 지원조직 강화
 - 노동권익센터 설치 **신규** 및 근로자문화복지시설 확충 **신규** 및 프로그램 운영 **계속**

전략별 실천 과제